

공 개



의안번호	제 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 18. (제 1 차)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1. 18.

1. 의결주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1.6.28.~2021.7.9. 및 2021.8.30.~2021.9.10. 기간 중 실시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522건)과 관련하여 회사에 과징금 565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나.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 치매보장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금 면책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62건)한 사실과 관련하여 회사에 과징금 25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

- ☐ 총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고, 총 13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6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과징금 90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등)

- ☐ 간편심사보험의 기납입보험료 11백만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과징금 5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마.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 의무 등 위반

- ☐ 위험률 부당 산출 및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200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바.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 ☐ 책임준비금을 과소하게 적립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80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2022.7.7.) 심의필
- 제1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3.1.12.) 심의필

<별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과징금 685백만원 부과 및 과태료 280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하 '회사')는 아래 (1)~(2)와 같이 총 522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해 기존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1) 회사는 기존보험계약이 청약 철회 등으로 소멸된 상태에서 그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시점에 기존소멸계약 등 일부 비교대상 보험계약이 제외되도록 비교안내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2016.10.18.~2021.2.25. 기간 중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434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무배당 삼성화재 ○○○○ ○○○○○○○○○’ 등 465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수입보험료 1,295백만원)을 청약하게 하면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 회사는 기존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 기존 유지계약 등 일부 비교대상 보험계약이 제외되도록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2016.10.28.~2021.1.18. 기간 중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53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무배당 삼성화재 ○○○○○ ○○○○○○○○○○’ 등 57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수입보험료 389백만원)을 청약하게 하면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소멸

□ 동 건은 「보험업법」 제9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나.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0.11.19.~2021.3.12. 기간 중 ‘무배당 삼성화재 ◇◇◇◇ ◇◇◇◇ ◇◇◇◇’ 등 2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 모집 시 사용하는 상품설명서에 ‘치매진단비Ⅱ(중증이상 : CDR3점 이상)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한 결과 총 19건(수입보험료 12.4백만원)의 치매보험 계약에 대하여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치매진단비Ⅱ(중증이상: CDR3점 이상) 특약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등)

- 2019.10.1.~2020.8.14.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삼성화재 △△△△ △△△△ △△△’ 등 6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통신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준상품 설명대본에 ‘치매진단비Ⅱ(중증이상 : CDR3점 이상)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한 결과 총 43건(수입보험료 55.8백만원)의 치매보험 계약에 대하여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치매진단비Ⅱ(중증이상:CDR3점 이상) 특약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등)

□ 동 건은 「舊보험업법」 제9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

(1)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아래 (가)~(다)와 같이 총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가) 회사는 2018.1.12.~2021.4.29. 기간 중 ‘무배당 삼성화재 ●●●●●●●’ 등 보험계약에 대한 149건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영양제 등이 치료목적으로 투여되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총 8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 (사례) 동맥관 개존증으로 중환자실 입원 중인 생후 6개월 환아에 투여한 영양제 투여비(5,180원)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두개골 종양 제거수술 환자에 대해 수술 당일 및 익일 투여한 영양제 투여비(120,800원)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등

(나) 회사는 2018.12.12.~2019.8.26. 기간 중 ‘무배당 삼성 □□□ □□□□’ 보험계약에 대한 3건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약관상 계약체결 이후 회사에 직업 및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비례보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함에도 직업 및 직무 변경을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총 3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 회사는 2018.10.8. ‘무배당 삼성화재 ◆◆◆◆ ◆◆◆◆ ◆◆◆◆’ 보험계약에 대한 1건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보험계약 체결 전 발병을 이유로 총 10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2) 지연이자 부당 과소지급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보험수익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관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7.8.7.~2021.4.14. 기간 중 ‘무배당 삼성화재 ◇◇◇◇◇ ◇◇◇◇◇◇◇◇◇◇’ 등 보험계약에 대한 132건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의 모집상 귀책사유*에 대한 조사로 인해 보험금 지급결정이 지연된 기간을 지연이자 산출 기간에 반영하지 않아 총 6백만원의 지연이자를 부당하게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설계사의 고지방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 보험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 신뢰도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여야 하고, 산출된 보험요율은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하며,

동 위험률이 적용된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 시에는 회사의 기초서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의 '무배당 삼성화재 ▽▽▽▽ ▽▽▽▽▽' 등 총 44종*의 보험상품에 포함된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지원금 특별약관' 등(이하 '피부치 특약')은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장하는 위험을 한정하고 있음에도,

* 무배당 삼성화재 ◆◆◆◆◆◆◆◆◆◆, 무배당 삼성●●●●●●●●●●, 무배당 삼성화재 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 ■, 무배당 삼성화재 ●●●●●●●●●●●●●●, 무배당 삼성화재 ■■■■■■■■■■ ■■■■■■■■■■ 등

** ① 피보험자가 특정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신체상해를 입고, ②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여, ③ "교통사고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를 보장

회사는 2020.6.10. 및 2021.3.31. 피부치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기소' 또는 '기소유예'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된 '특정 교통사고의 피해자 수**'를 기초통계로 사용함으로써,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보다 위험률을 높게 산출***하고 관련 보험료를 과대 산정한 사실이 있으며,

* '중과실 교통사고피해 부상 발생률(자가용, 영업용, 비운전자)' 및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피해 부상 발생률'

** 예) 2018년 「경찰범죄통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가해자 기소(유예)율은 31.5% 수준임에도 동 기소율이 반영되지 않은 「경찰범죄통계」內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신체피해상황'(피해자 인원수)을 기초통계로 사용

*** '기소' 또는 '기소유예' 비율 반영시 현재 위험률의 30% 수준으로 하향조정 할 필요

- 회사의 기초서류관리기준은 기초서류의 작성 원칙 및 내용이 보험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부치 특약 관련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한 기초서류 확인·검증 점검표의 ‘보험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에 부합한가?’라는 점검항목에 ‘적정’으로 기재하고, ‘보험업법 제129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절 등 보험요율 산출원칙에 부합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라는 점검 항목에 ‘적정’으로 기재하는 등 기초서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무배당 삼성화재 ◆◆◆◆◆◆◆◆◆◆’ 등 44종

(2)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 ☐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충분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 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의 선임계리사는 상기 피부치 특약이 포함된 총 44종의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하면서, 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사용한 기초통계 자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의견 제시 없이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검증 결과를 ‘적정’하다고 기재한 ‘위험률 검증확인서’를 발급하고, 동 위험률이 적용된 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대하여도 ‘보험약관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 산출내용이 일치’한다고 검증 결과를 기재하는 등 보험요율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8조의2, 제129조 및 제18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바.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아래 (1)~(2)와 같이 책임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립

** FY'16 752백만원, FY'17 921백만원, FY'18 676백만원, FY'19 938백만원, FY'20 654백만원

- (1) 회사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기분할지급 보험금(미지급보험금)에 대한 개별추산 지급준비금의 현재가치를 잘못*산정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결산 시 책임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결산기말 시점”의 현재가치로 계산하지 않고 “분할 보험금 지급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

** FY'16 752백만원, FY'17 748백만원, FY'18 646백만원, FY'19 918백만원, FY'20 654백만원

- (2) 회사는 보험금이 청구된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추산금액(지급준비금) 적립을 누락*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결산 시 책임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담당자의 착오로 보험금 일부 지급후 잔여 추산 보험금 적립을 누락

** FY'17 173백만원, FY'18 30백만원, FY'19 20백만원

-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

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서류 작성·변경의 절차 및 기준
2.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외부 검증 절차 및 방법
3.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감시·통제·평가하는 방법 및 관련 임직원 또는 제181조제2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역할과 책임
5. 그 밖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 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①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선임계리사·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공정한 보험계리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6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 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10의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

하거나 과소·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 舊 보험업법 (2016.8.1. 시행)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6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고지사항) ①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4.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자율
5. 보험 목적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나.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다.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제71조의4(기초서류관리기준) ①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 기초서류 작성·변경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 및 기초서류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 3. 임직원의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오. 보험회사가 법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 제3호	6,000
드. 보험회사가 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1항 제10호의2	10,000
흐.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 제13호	10,000

□ 舊 보험업법 시행령 (2016.8.1. 시행)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 법 제95조의2제1항에서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② 영 제6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計上)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④ 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75조(생명보험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76조의2(장기손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출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하여는 제7-74조부터 제7-76조까지를 준용한다.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 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위설치법, 금융업관련법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과징금)·제65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별표 7의2, 「은행법」 제65조의3(과징금)·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별표 3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별표 2·별표 3,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자본시장법」 제349조(과징금)·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제4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별표 19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별표 1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별표 2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별표 2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12., 2015.9.14, 2016.7.25, 2017.10.19>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이 위반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19>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3.12.20, 2017.10.19>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0>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6.14, 2010.11.12., 2015.9.14, 2016.7.25., 2017.10.19>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본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제4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6.14, 2010.11.12., 2015.9.14, 2016.7.25, 2017.10.19>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부가통신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6.14, 2010.11.12, 2013.12.20., 2015.9.14, 2016.7.25., 2017.10.19., 2020.5.13.>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심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	--	---	---------------------------------------	--

-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 중(2점)
-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나. 삭 제 <2013.12.20>

다. 삭 제 <2017.10.19>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0.11.12., 2015.9.14, 2016.7.25, 2017.10.19>
- (4) 삭 제 <2008.12.31>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 (1) 삭 제 <2017.10.19>
- (2) 삭 제 <2017.10.19>
- (3) 삭 제 <2017.10.19>
-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 (6) 삭 제 <2017.10.19>
- (7) 삭 제 <2017.10.19>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삭 제 <2017.10.19>
-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020.5.13.>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5.13.>
-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삭 제 <2017.10.19>

(7) 삭 제 <2017.10.19.>

(8)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020.5.13.>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범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19>

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목에서 이동 <2017.10.19>]

마. 기 타

-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 (6)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 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2017.10.19>

바. 삭 제 <2013.12.20>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2017. 10. 19. 개정 이전>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본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제4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에 한한다), 보험회사(특별이익제공관련 위반행위 제외),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2억원이하 (1단계)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단계)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4단계)	× 7/80
2천억원 초과 (5단계)	× 7/160

<산정례>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억원 × 7/10 + (법정부과한도액 - 2억원)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법정부과한도액 - 20억원)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180억원 × 7/40 + (법정부과한도액 - 200억원) × 7/80
2천억원 초과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180억원 × 7/40 + 1,800억원 × 7/80 + (법정부과한도액 - 2,000억원) × 7/160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

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4) 삭 제 <2008.12.31>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 (2)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융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7. 기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6호, '17.10.19. 시행)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2호 바목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7.10.19>

라. 삭제 <2017.10.19>

마.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바.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삭제 <2017.10.19>

6. 기본과징금의 산정 <개정 2017.10.19>

가. 삭제 <2017.10.19>

나.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자의 고의·과실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유형별로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 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7.10.19>

구분	고의	과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100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
중대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75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25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위반내용 및 정도	판단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매우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 보험거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 - 법규의 금지사항을 회피하거나 잠탈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규모가 현저한 경우 - 기초서류의 신고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익 침해가 중대한 경우 - 매우 중대하거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규모가 미미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차 조정) <개정 2017.10.19.>

위반행위 등의 기간	조정금액
3년 초과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50
2년 초과 3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20
1년 초과 2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10
9개월 초과 1년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3개월 이하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5

7.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1차 조정된 기본과징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법정 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1)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7.10.19>

(3)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4)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 범위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19>

라. 기 타 <개정 2017.10.19>

-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17.10.19>
- (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9.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舊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20호, '15.7.1. 시행)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2호 바목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기본과징금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 및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바.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2억원 이하	(1단계)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단계)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4단계)	× 7/80
2천억원 초과	(5단계)	× 7/160

<산정례>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억원 × 7/10 + (법정부과한도액 - 2억원)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법정부과한도액 - 20억원)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180억원 × 7/40 + (법정부과한도액 - 200억원) × 7/80
2천억원 초과	2억원 × 7/10 + 18억원 × 7/20 + 180억원 × 7/40 + 1,800억원 × 7/80 + (법정부과한도액 - 2,000억원) × 7/160

6. 기본과징금의 조정 (1차 조정)

가. 원칙

기본과징금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자의 고의·과실 및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자의 고의·과실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단계 조정)

구분	고의	과실
중대한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120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75
보통의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75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50
경미한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50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25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위반내용 및 정도	판단기준
중대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 보험거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 - 법규의 금지사항을 회피하거나 잠탈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규모가 현저한 경우 - 기초서류의 신고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통의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익 침해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 - 중대, 경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규모가 미미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단계 조정후의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2단계 조정).

위반행위 등의 기간	조정금액
3년 초과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50
2년 초과 3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20
1년 초과 2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10
9개월 초과 1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0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50
3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25

7.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1차 조정된 기본과징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은 기본 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보험업법」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

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범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 타

-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

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9.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6.30.>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경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1) 삭 제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범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3) 삭 제

(4) 삭 제

나. 감경 사유

-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8) 삭 제
-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 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23. 1.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685백만원 부과 과태료 280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하 '회사')는 아래 (1)~(2)와 같이 총 522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해 기존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1) 회사는 기존보험계약이 청약 철회 등으로 소멸된 상태에서 그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보험

계약의 청약시점에 기존소멸계약 등 일부 비교대상 보험계약이 제외 되도록 비교안내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2016.10.18.~2021.2.25. 기간 중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434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무배당 삼성화재 ○○○○ ○○○○○○○○○’ 등 465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수입보험료 1,295백만원)을 청약하게 하면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 회사는 기존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 기존 유지계약 등 일부 비교대상 보험계약이 제외되도록 비교안내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2016.10.28.~2021.1.18. 기간 중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53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무배당 삼성화재 ○○○○○ ○○○○○○○○○○’ 등 57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수입보험료 389백만원)을 청약하게 하면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소멸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나.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0.11.19.~2021.3.12. 기간 중 ‘무배당 삼성화재 ◇◇◇◇ ◇◇◇◇ ◇◇◇◇◇’ 등 2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 모집 시 사용하는 상품설명서에 ‘치매진단비Ⅱ(중증이상 : CDR3점 이상)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한 결과 총 19건(수입보험료 12.4백만원)의 치매보험 계약에 대하여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치매진단비Ⅱ(중증이상: CDR3점 이상) 특약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등)

- 2019.10.1.~2020.8.14.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삼성화재 △△△△ △△△△ △△△’ 등 6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통신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준상품설명 대본에 ‘치매진단비Ⅱ(중증이상 : CDR3점 이상)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한 결과 총 43건(수입보험료 55.8백만원)의 치매보험 계약에 대하여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치매진단비Ⅱ(중증이상:CDR3점 이상) 특약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등)

< 관련 법규 >

- 「舊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 의무 등)
- 「舊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설명 의무의 중요 사항 등)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

(1)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아래 (가)~(다)와 같이 총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가) 회사는 2018.1.12.~2021.4.29. 기간 중 ‘무배당 삼성화재 ●●●●●●●●’ 등 보험계약에 대한 149건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영양제 등이 치료 목적으로 투여되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총 8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 (사례) 동맥관 개존증으로 중환자실 입원 중인 생후 6개월 환아에 투여한 영양제 투여비(5,180원)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두개골 종양 제거수술 환자에 대해 수술 당일 및 익일 투여한 영양제 투여비(120,800원)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등

(나) 회사는 2018.12.12.~2019.8.26. 기간 중 ‘무배당 삼성 □□□ □□□□’ 보험계약에 대한 3건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약관상 계약체결 이후 회사에 직업 및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비례 보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함에도 직업 및 직무 변경을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총 3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 회사는 2018.10.8. ‘무배당 삼성화재 ◆◆◆◆ ◆◆◆◆ ◆◆◆◆’ 보험계약에 대한 1건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보험계약 체결 전 발병을 이유로 총 10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2) 지연이자 부당 과소지급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보험수익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관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7.8.7.~2021.4.14. 기간 중 ‘무배당 삼성화재 ◇◇◇◇ ◇◇◇◇◇◇◇◇◇◇’ 등 보험계약에 대한 132건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의 모집상 귀책사유*에 대한 조사로 인해 보험금 지급결정이 지연된 기간을 지연이자 산출 기간에 반영하지 않아 총 6백만원의 지연이자를 부당하게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설계사의 고지방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등)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무배당 삼성화재 ◆◆◆◆◆◆◆◆◆◆’ 등 14종의 간편심사보험의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동 간편심사보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 회사는 2017.12.26.~2020.12.23. 기간 중 총 4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함으로써, 기납입보험료 11백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보험계약자가 간편심사보험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처리해야 함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마.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등 위반

(1) 위험률 부당 산출 및 기초서류관리기준 미준수

□ 보험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 신뢰도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여야 하고, 산출된 보험요율은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하며,

동 위험률이 적용된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 시에는 회사의 기초서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의 '무배당 삼성화재 ▽▽▽▽ ▽▽▽▽▽' 등 총 44종의 보험상품에 포함된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부상 치료지원금 특별약관' 등(이하 '피부치 특약')은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장하는 위험을 한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2020.6.10. 및 2021.3.31. 피부치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기소' 또는 '기소유예'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된 '특정 교통사고의 피해자 수'를 기초통계로 사용함으로써,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보다 위험률을 높게 산출하고 관련 보험료를 과대 산정한 사실이 있으며,

- 회사의 기초서류관리기준은 기초서류의 작성 원칙 및 내용이 보험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부치 특약 관련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한 기초서류 확인·검증 점검표의 '보험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에 부합한가?'라는 점검항목에 '적정'으로 기재하고, '보험업법 제129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절 등 보험요율 산출원칙에 부합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라는 점검 항목에 '적정'으로 기재하는 등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충분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 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의 선임계리사는 상기 피부치 특약이 포함된 총 44종의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하면서, 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사용한 기초통계 자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의견 제시 없이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검증 결과를 '적정'하다고 기재한 '위험률 검증확인서'를 발급하고, 동 위험률이 적용된 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대하여도 '보험약관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 산출내용이 일치'한다고 검증 결과를 기재하는 등 보험요율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4(기초서류관리기준)
- 「보험업감독규정」 제7-75조(생명보험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제7-76조의2(장기손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출기준)

바.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아래 (1)~(2)와 같이 책임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립

** FY'16 752백만원, FY'17 921백만원, FY'18 676백만원, FY'19 938백만원, FY'20 654백만원

- (1) 회사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기분할지급 보험금(미지급보험금)에 대한 개별추산 지급준비금의 현재가치를 잘못*

산정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결산 시 책임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결산기말 시점”의 현재가치로 계산하지 않고 “분할 보험금 지급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

** FY'16 752백만원, FY'17 748백만원, FY'18 646백만원, FY'19 918백만원, FY'20 654백만원

(2) 회사는 보험금이 청구된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추산금액(지급준비금) 적립을 누락*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결산 시 책임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담당자의 착오로 보험금 일부 지급후 잔여 추산 보험금 적립을 누락

** FY'17 173백만원, FY'18 30백만원, FY'19 20백만원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손해보험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62	02-3145-7524